

현 경제위기 대안

이채언 |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

<차례>

1. 세계경제위기 대안
2. 한국경제위기
3. 한국경제위기 대안

1. 세계경제위기 대안

1-1. 시장 생산의 지방화

- 세계무역은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 2008년 12월 이후로 축소되어 왔음
- 더이상 안전한 통화가 없기 때문에 무역흑자를 축적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상품생산은 국내시장으로 돌려질 것인데, 이는 국내 경제에서 더 많은 소득과 더 큰 구매력을 요구함

1-2.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 이윤의 최대화는 국내시장의 팽창과 더이상 양립할 수 없음
- 일단 국내시장이 타겟이 되면 수익성은 기업활동의 목표가 될 수 없음
- 기업의 사회적 기여 및 사회적 유용성이 수익성에 우선될 것임

1-3. 시장 원리에 따른 금융시장 해결

- 은행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정부담보물 회수
- 중앙은행의 화폐발행권 철회

1-4. 정부의 직접 지폐 발행

- 예산 적자가 구축효과를 발생하지 못할 것임
- 높은 이자율이 더이상 없음
- 정부는 실업문제에 있어 정책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음

1-5. 공적 자금의 민주화

- 이자가 거의 없는 정부대출이 개인, 기업, 학생, 예술가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가능하게 될 것임
- 동아시아경제에 있어서 비슷한 증상의 치료가 가능
- 신용배당의 사회적 조정, 새로 발행된 통화의 보다 민주적이고 균등한 분배
- 공공보건, 정보커뮤니케이션, 교육, 에너지 분야 등이 공익을 위해 보호될 수 있음
- 인터넷의 힘에 의해 사실상 직접민주주의가 경제에 적용될 것임

1-6. 부문 및 지역 경제 간의 균등한 발전

- 사회적으로 승인된 새 통화 및 신용배당의 분배는 자연스레 균등발전과 생태적으로 균형 잡힌 발전을 가져올 것임

1-7. 파생금융무역의 불법화

- 주류 경제학자들조차 파생무역이 왜 무의미하고 해로운지, 왜 불법인지에 대해 여러 이유들을 내 놓았음
<http://blogs.ft.com/maverecon/2009/04/useless-finance-harmful-finance-and-useful-finance/>
- 파생무역은 손실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마이너스 섬계임이 됨
- 금융 및 기본 경제의 편차는 1980년대 이래 파생무역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뚜렷해져 왔음

Figure 2: US nominal GDP vs financial and non-financial profits (rebased to 100, 1970)



Source: Deutsche Bank, Bureau of Economic Analysis

1-8. 규모의 경제를 위한 동아시아 연합국

- 동아시아지역 수출위주의 경제는 국내시장으로 축소시키기에 큰 어려움이 있음
- 동일 지역의 비슷한 경제적 상황에서 그 대처법의 유사성이 증가할 것임

2. 한국경제위기

2-1. 1997년 위기

2-1-1. 발단

- 국제경제구조 (정실 자본주의)
- 외국자본의 단기 회수
- : 시초는 1960년대말부터 존재했으나 1997년에 위기가 발생
- : 일본의 국제단기인터뱅크 대출이 갑자기 악화됨
- : 일본에 국내 위기가 발생하자 일본 은행들이 아시아에서 단기자본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함
- : 한국정부는 일본 은행에 대한 행정적 지도를 일본정부에 요청, 이에 일본정부가 수락하고 AMF를 설립함
- : 미국정부가 이에 개입하여 행정적 지도를 중단시킴
- : 국제금융기구(IMF) 긴급융자는 실패했고, 대신 미국의 보석(bail-in)이 시작됨 (다른 행정 지도)
- : 미국의 구제 이후 혹독한 요청이 뒤따름(이자율 상승, 개혁, 자본시장 완전 개방)

2-1-2. 반응

- : 대안 부재
- : 위협감 고조
- : 내부 혁신을 위한 기회 - 외국 상사, 영사관의 관리(comprador)

2-1-3. 결과

- 개혁: 노동시장 > 금융기업 > 비금융기업 > 정부
- 현금 보유하고 증가
- 기업과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 증가
- : 경제의 투명성 상승 → 2,520억불의 국고 유출 (2001-2007).
- : 낮은 경제성장률, 실업 증대, 국가부채 상승, 사회적 분극화 심화, 자살률 증가, 출산율 감소 등

2-2. 2008년 위기

- 외국 은행의 실패로 인한 단기자본의 상환 증가
- : 국고 유출이 2520억달러(2001-2007)에서 1180억달러(2001-2008)로 감소.

2-3. 1997년 이전에는 위기가 없었나?

- 1973년, 1979년, 1980년, 1986년 등 여러번 위기가 있었으나 그 때마다 미국이 호의적으로 구제해 줌
- 군부독재가 소위 '경제적 성공'을 이유로 정당화 됨
- 직접선거로 권력을 잡은 정부가 1996년 전통적인 반정부세력을 축출함

3. 한국경제위기 대안

3-1. 현황

- 선물, 보통주, 담보, 보증, 파생상품(Futures, Equities, Bonds, Securities, Derivatives) 등 자본시장통합법
- 비규제화, 자율화, 개방화 증진
- 시초의 사유화는 가리앉은 증권시장으로 인해 약화됨
- 미국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실패 확대.

3-2. 일반 비금융분야 문제

- 세계무역 축소 : 각국은 내부시장 모색 (더이상 안전한 통화도 신뢰할 만한 은행도 없음)
- 무역균형이 무역흑자보다 선호됨
(자본이 수입하는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면 외국자본을 축적할 필요가 없음)

3-3. 일반 비금융 분야 문제에 대한 해결책

3-3-1. 국민 생산을 위한 시장 변화

- : 외부 시장에서 내부 시장으로
- : 더이상 수출위주의 생산도 국제경쟁도 하지 않음
- : 대중의 구매력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임금상승 등)

3-3-2. 기업과 국가의 패러다임 변화

- : 기업의 목적이 이윤극대화에서 사회적 기여(고용, 유용한 서비스 등)로 바뀔 것임
- : 생산 지구와 거주 지역간의 균등한 발전

3-3-3. 인접국과 연합

- : 전통방식의 수출에 있어서 국내시장이 협소함

3-4. 재정 문제

3-4-1. 구축효과는 재정적자의 유용성에 방해가 됨

(정부가 통화를 중앙은행에서 빌리지 않고 직접 발행한다면 구축효과가 제거될 수 있음)

3-4-2. 은행의 큰 손실은 도덕적 해이, 비규제화, 비감시, 비단속 등으로 발생

3-4-3. 공적긴급융자의 붕괴

- : 정부는 도산한 은행의 부실자산을 고가의 현금과 교환
- : 도산 은행이 처벌을 받기보다 정부보조를 받는 것은 도덕적 해이
- : 정부가 도산 은행으로부터 구매한 유해자산을 다시 파는 것이 금융시장을 붕괴하게 만들 것임

3-5. 금융문제의 해결책

- 정부는 중앙은행의 통화발행권을 인수해야 함(구축효과가 없어질 수 있음)
 - 정부는 은행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담보물을 회수해야 함
 - 도산 은행의 은행업무기능이 국유은행으로 넘어가야 함
 - 금융은 국가의 네번째 독립 파트
 - 국가의 다른 독립파트와 상호견제 및 균형을 이루어야 함
 - 새로운 신용배분 및 새로 발행된 통화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분배되어야 함
 - 파생상품시장은 제한적이어야 함
- : 파생상품은 무익하고 종종 유해함(불확실성 혹은 위험성을 감소시키지 못함)

불가항력의 위기에 의해 약화된 자본주의

파비앙 타히트(Fabien Tarrit) | 항스(Reims)대학 상과대학 전임교수

<차례>

1. 1929이후 가장 폭력적인 위기

- 1-1. 위급함을 알리는 확연한 징후들
- 1-2. 1929년 위기와 현 위기의 규모 비교

2. 자본주의 심장부에서 발생한 위기

- 2-1 2001년~2006년 경제호황
- 2-2. 신기술위기와 부동산거품의 붕괴
- 2-3. 부동산위기가 금융위기로 발전
- 2-4. 금융위기에서 경제위기로 : 생산의 감소

3. 이권관계자들이 제시하는 위기에 대한 해답들

- 3-1. 대규모 공적 개입
- 3-2. 착취의 증가
- 3-3. 보호주의적 후퇴와 힘의 관계의 재정립

4.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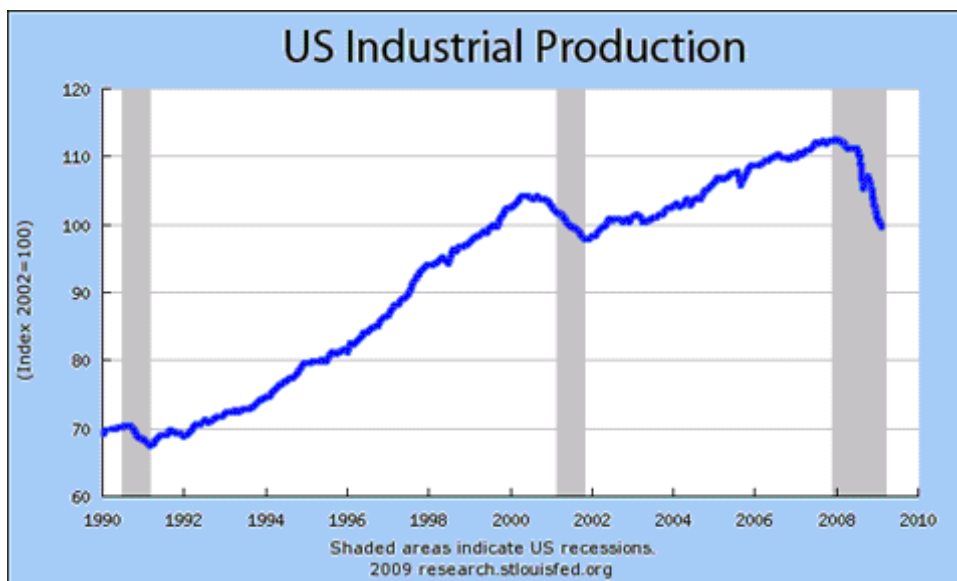
점차적으로 발생빈도의 주기를 단축하며 일어났던 여러번의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상대적으로 큰 호황의 시기를 맞이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경제는 또 다시 새로운 위기를 맞으며 호황의 시기를 마감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가 겪었던 가장 스펙터클한 위기의 순간들만 열거해보면, 1987년 10월 월가 주식폭락, 1993년 유럽화폐시스템 위기, 1995년 멕시코경제위기, 러시아경제도산, 1997년과 1998년의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경제위기, 2000년과 2002년 신기술 투기거품 붕괴로 인한 위기, 2001년 아르헨티나경제위기 등을 나열할 수 있다. 이제 전세계 경제는 다시금 새로운 위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약 1년전에 발발한 거대 규모의 현 경제 위기는 그 충격의 여파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그 탈출구에 대한 예상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사실 자본주의가 위기의 순간들을 겪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현 위기는 1970년대말 이후 발생했던 여러차례의 위기상황들과 비교해볼 때 그 성격과 규모면에서 특수성을 드러낸다. 미국의 부실주택담보대출로부터 시작됐던 현 경제위기는 세계자본주의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면서 사실상 자본주의체제 자체의 해체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금융자산 가치와 생산상품 가치에 대한 백분율 관계를 살펴보면, 1980년에는 금융자산의 가치가 상품생산 대비 109% 더 높았으나, 2005년에는 316%(경제성장속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던 유럽의 경우 303%, 미국의 경우는 405%)를 넘어섰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가치는 점점 더 생산품의 가치와 동떨어지게 됐다. 세계금융시장은 장기대출보다는 리스크가 높으나 단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단기대출상품 거래에 집중했다. 시장에서 매우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단기간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기업합병, 외환시세, 원자재시세, 주식시세 등의 변동에 대한 예측성투기를 하는 투기펀드(헤지펀드)와 집단경영체제의 금융기관의 수가 1990년의 610개에서

2007년 상반기에는 9575개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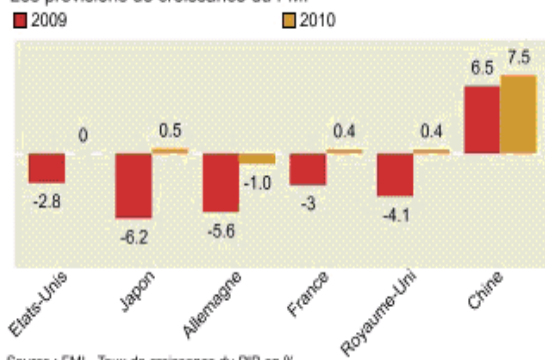
1. 1929년 이후 가장 폭력적인 위기

1-1. 위급함을 알리는 확연한 징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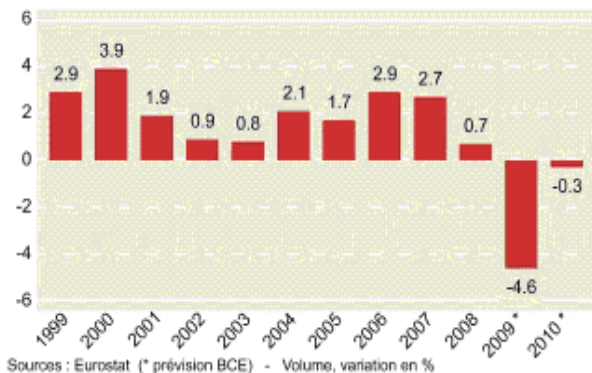
미국의 경우 산업생산의 수준이 약 10년전의 수준으로 추락했으며 이는 총생산의 침체 즉, 세계경제의 위기를 유발하는데 일조했다. 전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현재 생산의 수준은 2차세계대전 이후 전례없이 감소했다. 2009년 상반기말의 생산감소폭은 유럽의 경우 연 대비 12%. 미국의 경우, 11%, 브라질 15%, 대만 43%로 떨어졌다. 한편 수출감소폭은 독일 20%, 일본 46%, 미국 23%이다.



Les prévisions de croissance du F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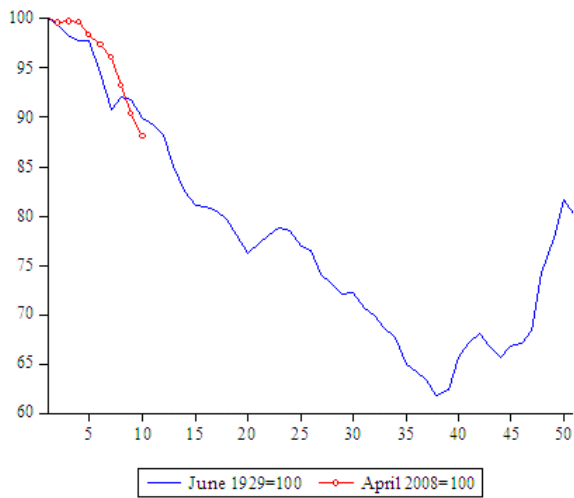
L'évolution du PIB de la zone eu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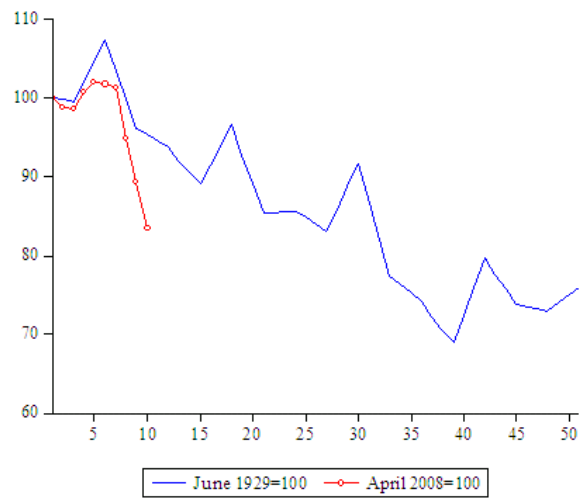
1-2. 1929년 위기와 현 위기의 규모 비교

현 경제위기를 1929년 위기와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현 경제위기는 경제침체의 속도의 급격함과 그 규모면에서 1929년의 경제위기보다 훨씬 심각한 측면을 보인다. 1929년의 경우 위기를 겪었던 초반 6개월동안 생산이 5% 감소했던 반면 현 위기의 경우 생산이 12% 감소되었고, 1929년 무역이 5% 감소했던 반면 현재는 16%의 감소를 보였다. 게다가 1929년의 위기는 미국이 세계자본주의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던 시기에 발생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주도권은 극도로 약화된 상태다. 물론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1929년의 위기는 적어도 그 폭력성에서 현 위기와 비교될 수 있다. 반면 1980년대 이후의 여러 위기들은 지금의 위기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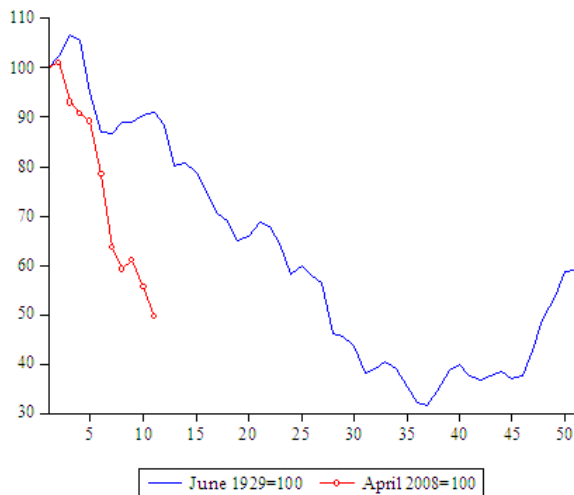
세계산업생산



주가지수



세계무역량



2. 자본주의 심장부에서 발생한 위기

체제 자체의 중심부에서 발생한 현 위기는 결코 세계자본주의경제에 대한 하나의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으로 치부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 위기는 자본주의체제의 역동성, 그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다. 현 위기의 규모와 급진성은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의 경제호황기의 여러 조건들과 관련이 있다.(2.1) 즉, 신기술위기는 부동산거품 붕괴(2.2)에 영향을 미쳤고, 이후 부동산위기는 금융위기(2.3)로 발전했고, 중국에 경제위기(2.4)를 유발했다.

프레드릭 엥겔스는 자본주의가 반복되는 위기들에 대처하기 위해 선택하는 대안들 바로 그 속에 이미 미래에 더 심각한 위기를 유발할 씨앗이 움트고 있다고 예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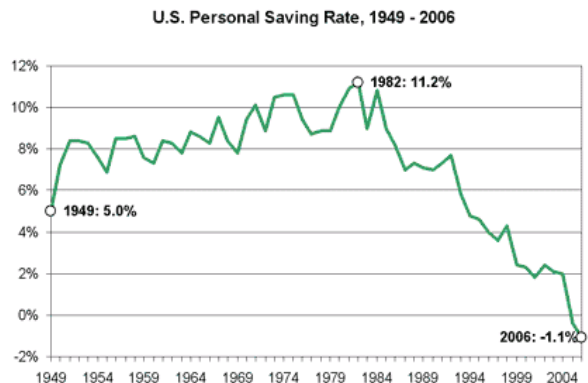
2-1. 2001년~2006년 경제호황

2003년에서 2006년 사이 경제성장률은 연 4.9%, 즉 197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낮은 인플레이션을 동반했다. 이 당시 국제금융기구(IMF)는 적어도 2년간은 이런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흐름 속에 2006년 경제성장률은 심지어 5.5%에 이르렀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았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에 따른 복지수준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기 호황은 무엇보다 세계경제대국에서 특히 심화된 노동자착취와 임금불균형의 심화와 같은 경향들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전례없는 초부유층 부유화의 가속화는 소득불균형의 심화를 극대화했다. 여기에 중국, 인도와 구소련 연방국가들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은 비교적 단기간에 세계 노동력을 배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상황은 한편으론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를 낮추고, 다른 한편으론 임금삭감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착취율을 높여 이윤율 저하를 막는 구실을 했다.

2-2. 신기술위기와 부동산거품의 붕괴

2001년 신경제의 위기는 1929년 위기가 유일한 비교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규모의 주식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했다. 주식위기는 심각한 경제둔화, 기업투자의 막대한 감소, 해고증가 등을 동반했다. 2001년 3월에 경기는 침체에 들어섰고, 이런 현상은 같은 해에 일어난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 참사로 가중되었다. 그러나 이런 경기침체는 소비수준의 유지 덕분에 공황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다. 가계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대거 저축을 줄였다. 이런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특히 미국정부는 막대한 재정지출을 실시했는데 이 재정지출의 중심에는 2001년 세계무역센터참사 이후 증가된 군비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3. 부동산위기가 금융위기로 발전

신용공급이 완만했음에도 높은 리스크의 투자와 기업에 대한 투기는 근래 투기거품의 형성을 이끌었다. 이후 일어난 신용경색은 기업들과 투자기금, 투자기금과 주요산업은행, 투자은행의 줄도산을 일으켰다. 부동산시장의 위기와 금융시장의 위기가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희귀한 현상은 이런 과정에서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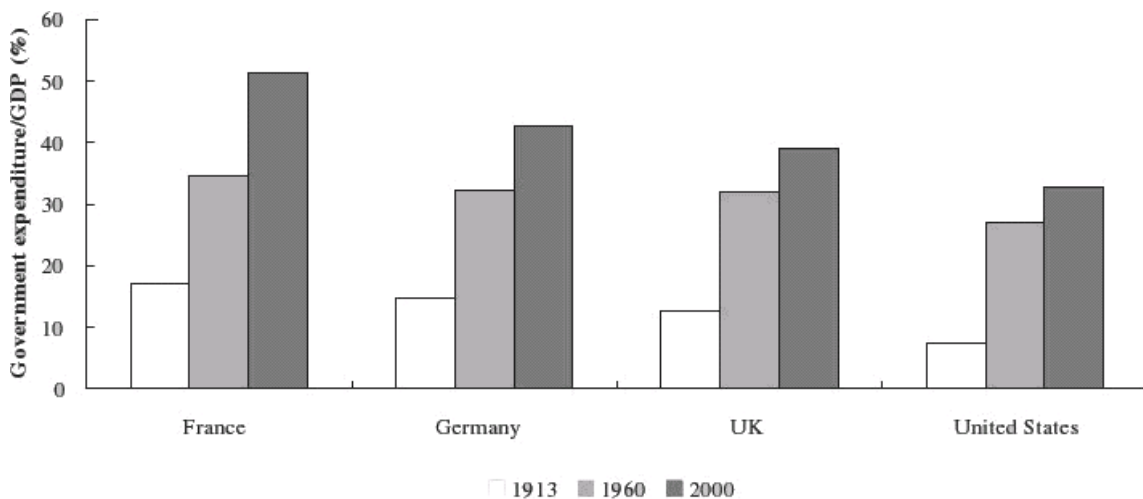
2-4. 금융위기에서 경제위기로 : 생산의 감소

국가의 광범위한 개입에도 불구하고, 생산분야는 신용경색의 영향을 받았다. 현 위기는 우선 세계수준에서의 자본축적의 위기다. 1930년대보다 더 심각하고 더 긴 공황의 위험을 예상해야만 한다. 현 위기는 자본주의체제의 위기로, 위기의 발발은 1980년대부터 존재했던 정치적 시도들(자본유동을 더 용이하게 하고, 임금인하에 대한 압력을 가중)에 의해 더욱 가속화 되었다.

3. 이권관계자들이 제시하는 위기에 대한 해답들

3-1. 대규모 공적 개입

최근 우리는 자유시장경제이데올로기의 후퇴와 개입에 의한 광범위한 구조조절로의 회귀를 목격한다. 확실히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붕괴는 피해야만 한다는 원칙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되고 있다. 우리는 베어스틴스(Bear Sterns, 월가에서 5번째로 중요한 기업)에 대한 구제조치와 패니매(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 이 회사의 대출활동은 미국 저당대출의 절반, 주택담보대출의 75%를 차지)의 국유화 등을 통한 국가자본주의로의 회귀상황을 맞고 있다. 이것은 1930년대 루즈벨트의 뉴딜과 전시경제의 그것과 같은 성격을 띠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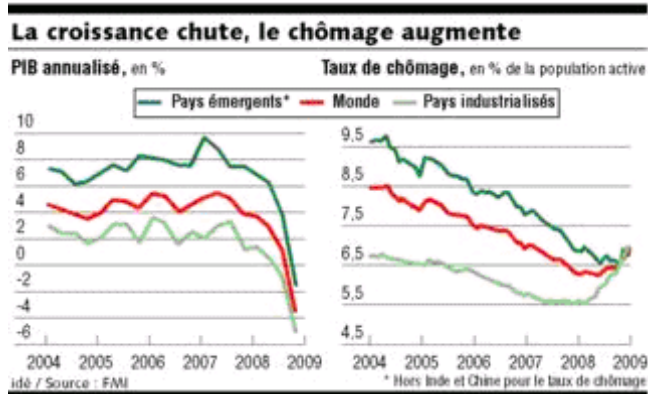


Source: Commission services based on IMF and OECD data.

3-2. 착취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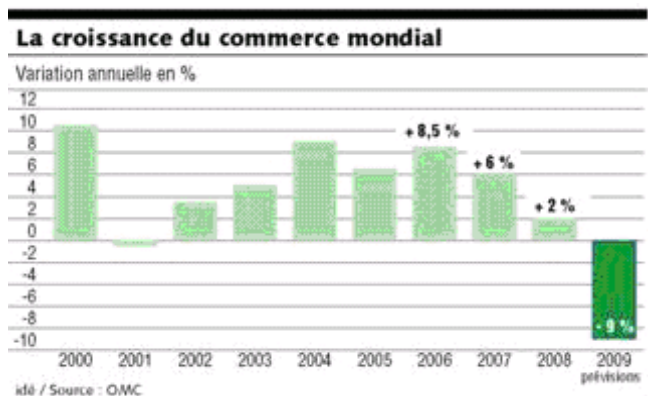
위기 탈출을 위해서 자본가들은 착취율을 높이고 유동자본·고정자본 구분 없이 투입되는 자본을 감소시켜 이윤율 하락을 막고 이를 통해 이윤을 재창출할 조건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임금의 즉각적 또는 점차적 인하, 해고, 공장폐쇄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노동임금에 대해, 특히 저임금의 경우 소득세를 절감하는 방식을 통한 자본가 부담의 경감을 제안했다. 사실 프랑스의 예를 들어볼 때, 최저임금이 명목임금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인해 최저임금의 인상이 지속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어떤 경우이나 이러한 이윤율 회복과 관련된 임금에 대한 논의들은 노동력의 가치를 절하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확실히 이윤율을 회복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신용을 다시 회복하는 것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3-3. 보호주의적 후퇴와 힘의 관계의 재정립

최근의 상황에 대해 세계적 광고마케팅그룹 옴니콤그룹(Omnicom Group Inc. OMC)은 각 국가들이 보호주의적 경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국제통화기금의 경우, 2009년 세계무역량이 12% 감소해 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를 맞을 것이라고 예견한다. 외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지난해 세계적 규모에서 볼 때 15% 감소했고, 2009년에는 그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은 분열되고 있다. 독일을 주축으로 27개국의 지도자들은 경제위기를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동유럽을 돕기 위한 총체적 계획 수립을 거부했다.

현 상황이 국가간 역학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고 있다는 것은 확연한 사실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 위기가 가지는 특수성은 이번 위기의 진원지가 자본주의의 중심지, 즉 미국이라는 점이다. 40년전부터 미국자본은 크게 약화되었다. 달러위력의 감소는 이를 증언한다. 물론 달러는 여전히 기축통화의 지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거대한 규모의 적자를 내고 있는 최대 채무국중 하나다. 오바마가 제안하는 재정안은 국내총생산(GDP)의 12.3%에 해당하는 적자, 즉 전무후무한 재정적자를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가지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1970년대 이후 미국이 기반 산업과 생산에 있어 자신의 주요경쟁상대국을 미국경제의 파트너로 삼아 왔다는 사실이다.

4. 결론

현 경제위기가 1929년 위기보다 더 폭력적인 생산의 감소, 기업 파산, 실업률 증가 등 자본주의체제의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현 시기를 역사적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이 위기는 단지 그 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본주의체제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것이며, 이 위기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길었던 자본주의호황기에서 그 자양분을 얻은 위기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겪었던 위기들과 구분된다. 각 국가들은 이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별 대규모 구제계획을 세웠고, 국제적 협의 관계는 이 과정에서 수정되었으며 이런 상황속에서 노동자들은 더 많은 고통을 감수하게 되었다. 자본주의가 출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본주의는 그 존재 자체에 의해 규칙적으로 위기의 순간을 맞았다. 1636년 튜립으로 인해 발발했던 경제위기, 1929년 위기 등을 거쳐 지금의 서브프라임위기까지, 각 위기상황의 특수성이 무엇이던 간에 노동자계급은 생필품 가격상승, 해고, 실업 등과 같은 자본가의 이윤을 회복을 위한 조치들의 가장 큰 희생자였다.

대부분의 은행에 대한 구제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이루어지면서 미래에 이런 현상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세계경제의 주기적인 불안정성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방편으로 행정자문의 도덕성을 재정립하고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여하는 방식은 마치 나무다리에 붕대를 감는 것과 같은 유용성만을 가질 것이다. 참된 대안은 이윤을 자본주의체제의 동력으로 만드는 생산수단의 사유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생산이 노동자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생산수단의 집단적 소유에 기반을 둔 경제를 정립하는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